|  |  |  |
| --- | --- | --- |
|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
| **2016년 5월 4일**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
| **총 5장** | **담당: 홍보실 윤정욱 전문원** |
| **전화: 02-3701-7349** |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硏,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평회 18일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8일(수)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저서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서강대학교출판부, 2015)을 주제로 ‘제 8회 아산서평모임’을 개최한다.

정수복 작가의 사회로 김명섭 교수가 발제하며 박명림(연세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서평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인가, 6.25전쟁인가? 6.25와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관심을 끄는 ‘평화협정’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는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 /

02-3701-7349)로 **16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제8회 아산서평모임》 행사개요

\*[참고 자료2] 김명섭 교수 약력

\*[참고 자료3]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책소개

\*[참고 자료4] 주요 참석자 약력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 |

|  |
| --- |
| **참고 자료1** |

**제 8회 아 산 서 평 모 임**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일시: 2016년 5월 18일 (수) 6:30pm-9:00pm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주관: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

* 사회: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 발제: 김명섭(연세대학교)
* 토론: 박명림(연세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  |  |  |
| --- | --- | --- |
| **18:30~19:00** | **저녁 식사** | |
| **19:00~19:05** | **인사말** | |
|  | 김석근(아산정책연구원) | |
| **19:05~19:10** | **연사자 소개** | |
|  | 정수복(사회학자/작가) | |
| **19:10~19:45** | **발제 및 지정토론** | |
| **발제**  **및**  **지정토론** | **사회자** | 정수복 |
| **발제자** | “조선 vs. 한국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 이후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
| 김명섭(연세대학교) |
| **토론자** | “정전협상과 정전체제 연구의 절정 또는 심연” |
| 박명림(연세대학교) |
| “’준평화체제’로서의 한반도 정전체제” |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
| **19:45~20:00** | **휴식** | |
| **20:00~21:00** | **자유토론** | |

|  |
| --- |
| **참고 자료2** |

**주요 참석자 소개**

**발제자**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1대학(판테온-소르본) 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저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대서양문명사: 팽창, 침탈, 헤게모니』(한길사, 2001)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89, 공저)

**토론자**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저서】 『역사와 지식과 사회』(나남, 2011)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2)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2』(나남, 1996)

****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저서】 『한국의 정치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공저)

『한반도 분할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한국 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사회자**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 『응답하는 사회학』(문학과지성사, 2015)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로도스, 2013)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12)

|  |
| --- |
| **참고 자료3** |

**저자 및 도서 소개**

****

김명섭 교수가 6.25전쟁을 처음 연구주제로 삼았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가득했던 신촌에서 정치학 석사학위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당시 연세대에는 역사와 정치가 접맥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3개 대학원 학점인정제도가 있어서 3개 대학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분단구조화의 과정에서 본 한국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의 일부는 1980년대의 격동기에 분출했던 한국현대사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시리즈에 수록되었다. 돌이켜 보면 한국현대사의 진실을 은폐했던 반공주의적 도그마에 대한 반발은 반(反)-반공주의적 도그마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90년 아직 소련(Soviet Union)이 사라지기 전, 유럽으로의 유학은 미소냉전 하의 6.25전쟁을 좀 더 중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외롭지만 자유로웠던 유학생 신분으로 파리 14구 시떼 유니베르시테 도서관, 케 도르세이(Quai d’Orsay) 문서고, 벵센느의 SHAT(프랑스 국방부 문서고), 낭떼르의 BDIC, 영국의 공문서보관소(Public Record Office)를 비롯하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Records Administration), 그리고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을 쓰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자는 1996년 파리1-팡테옹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직후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한신대 조교수, 부교수, 국제학부장, 그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조교수, 부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문제를 국제정치사적 시각으로 고찰하고, 국제정치사를 한국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거대한 체스판》, 《제국의 선택》 등의 책을 번역했고, 《대서양문명사》(2001), *Northeast Asia and the Two Koreas*(2008, 공저) 등을 출간했다. 현재 국제학술지 *Geopolitics*의 편집위원이고, 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이다.

**\*주제도서 소개**

1917년에 기원을 두고 있는 냉전의 세계사는 마치 두 마리의 코끼리가 충돌하는 거대한 결투(great duel)에 비유할 수 있다. 코끼리의 꼬리만을 보면서 전체를 뱀과 같다고 보는 인식론적 틀을 벗어나 ‘전면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6.25전쟁의 정전과정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두 마리의 코끼리가 충돌하는 거대한 결투와도 같았던 냉전의 축소판(microcosm)이다. 전체적 측면을 한 눈에 보기 위해 졸보기안경을, 미세한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돋보기안경을 써야 했다.

6.25전쟁은 약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었던 동시에 정전체제의 탄생을 통해 제3차 세계대전을 봉인한 냉전의 머리가 되는 ‘끄트머리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과의 공산주의적 관념연대에 기초해 있던 김일성과 박헌영 등의 지휘 하에 있던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아니라)의 전면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17년 레닌의 전복노선보다 1939년 폴란드와 핀란드를 침공했던 스탈린의 전쟁노선을 계승했다. 이 전쟁은 아코디언처럼 전선이 요동치던 전면전쟁기(全面戰爭期)를 거쳐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으로 화전양면기(和戰兩面期)를 맞이했다. 정전협상은 군사령관들 간의 정화와 정전을 위한 협상으로서 정치인들 간의 평화협상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서방기자들은 1951년의 여름이 가기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두 번의 겨울을 보내고 1953년 7월 27일에 되어서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왜 6.25전쟁의 정전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이 책은 정전협상 회의록을 비롯한 당대의 국제적 1차 사료들과 2차 문헌들을 섭렵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1953년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탄생을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6.25전쟁의 정전을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 뿐만 아니라 ‘전(前)과거와 과거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6.25전쟁의 정전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인간의 눈으로 “있던 그대로의 과거(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 … 을 위한 역사”라고 표현되는 현시(現時)적 대의(大義)에서 벗어나 다른 시간의 인간과 다른 공간의 인간을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적 관점에서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한다. 보편윤리적 선(善)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의를 위한 역사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역사를 과장하거나 곡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것은 마치 역사의 흐름이 신국(神國)을 향해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를 그러한 대의에 종속시켰던 중세유럽의 목적사관(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history)을 연상시킨다.

전쟁의 광기를 요술램프 속에 집어넣기 위한 정전협상이 시작된 시각을 한국 국방부에서 공간된 《6.25전쟁사》는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전담판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기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 정전협상회의록에 따르면 쌍방은 약속시간을 정하면서, “우리들 시간(our time)”인가, 아니면 “당신들 시간(your time)”인가를 확인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북의 새벽 4시는 38선 이남에서는 같은 날 새벽 5시였다. 평양에서는 6.25전쟁 이전이나 이후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1950년 4월 1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차(時差)는 6.25전쟁 개전 관련 사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지만, 커밍스(B. Cumings)나 스툭(William Stueck)을 비롯한 저명한 6.25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되어 왔다.

서머타임이라는 생소한 제도로 인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존재하게 된 서로의 시차(時差) 이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차(視差, parallax)가 존재했다. 조선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전쟁은 정치적 이념은 물론 서로 다른 시간적 표준을 가진 두 권역(圈域)들 간의 충돌이기도 했다. 저자는 조선인민군 대표단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장 찰스 터너 조이(C. Turner Joy, 1895-1956), 그리고 한국군 대표 백선엽이 개성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만나는 장면이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die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이 책에서 주요 분석대상이 된 정전협상 회의록 작성에 참여했던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세 가지 의제들을 놓고 벌인 설전의 결과를 1무 1패 1승이라고 총평했다. 세 가지 주요 의제들 중 첫 번째 의제인 군사분계선의 획정과 관련해서는 무승부, 두 번째 의제인 정전상태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패배, 세 번째 의제인 포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승리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국제연합군 측의 협상성적을 좀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공산군 측이 주장한 38선으로의 복원 대신 교전선 분할 원칙을 관철시키기는 했지만 교전선 이북의 방대한 해상과 공중을 양보하면서도 NLL과 같은 쟁점을 남겨놓았다. 둘째, 소련을 중립국으로 하자는 공산군 측의 협상전술에 말려들면서 공산군 측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양보했다. 셋째, 납북자가 포함된 실향사민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제연합군이 정전협상에 거둔 승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 제네바협약을 거부하고, 포로들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켜준 것이다.

2015년에 유행한 “광복70년, 분단70년”이라는 정치구호는 현재 서울과 평양을 갈라놓고 있는 체제가 단순히 1945년 체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른바 ‘분단체제’란 1945년 체제에 더해서 1948년 체제, 그리고 1953년에 수립된 조선/한국 정전체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NLL, DMZ, 미귀환 국군포로,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고 불린 피랍자/피난민/이산가족, 유해 반환,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과 기속성,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정전협정 간의 관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민주적 운용과 지속성,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평화적 역할,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무수한 정치적 쟁점들과 직결되어 있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There is nothing between war and peace)”라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의 명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정전은 전쟁에 가깝고,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끝내야 할 상태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7.27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체제가 국제법적(de jure) 전쟁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평화협정에 의해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始點)이 곧 전쟁의 종점(終點)이라는 유럽의 근대국제법적 전통에 충실한 생각이다. 그러나 정작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평화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 패전국 독일과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유럽과 1951년 패전국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던 동아시아 중 어디가 더 평화로웠을까? 또 다른 평화협정의 패러독스는 베트남평화협정이었다. 미국이 서둘렀던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캄보디아에서의 ‘킬링필드,’ 그리고 1979년 공산주의국가들끼리의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이어졌다.

6.25전쟁의 결과 탄생한 정전체제는 1차적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부활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와 결합한 조선민족주의와의 충돌 속에서 성장한 한국민족주의에 기반한 한국군의 북진통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도 결합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6.25전쟁 이후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독일재무장과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이중봉쇄를 특징으로 했던 유럽의 냉전체제 보다 더 복합적인 삼중봉쇄체제(三重封鎖體制)였다. 이렇게 볼 때, 코리아 평화체제는 조선/한국 정전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저자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정전상태를 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상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칫 정전 대신 속전(續戰)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정전체제의 불완전했던 ‘긴 평화’를 보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전면남침을 지시했던 평양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전쟁책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고, 개전사실조차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6.25전쟁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방어전쟁이었다고 믿는 관념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그들은 평화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온화(溫和)보다는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듯이 조선/한국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보다는 못했지만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열전보다는 나았다. 코리아와 동유라시아(Eastern Eurasia)의 영구평화를 향한 도정은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맹목적 폐기가 아니라 보전(conserve), 폐기(abandon), 그리고 초월(transcend)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기(揚棄, aufheben)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